

대통령은 '노동시간'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태평로

김태훈
논설위원



정부가 제안한 노동시간 유연화를 두고 야당과 노동계가 '주 69시간제'라고 한 것은 악의적인 낙인에 가깝다. '기절 노동'이라는 비난도 터무니없는 억지다. 그럼에도 결국 노동현장은 정부 제안에 등을 돌렸다. 대통령은 "60시간이 상한"이라며 말을 바꾸더니 었그제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국민 눈에는 혼란으로 비친다. 야당은 기회다 싶었는지 '주 4.5일 근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동안 근본적인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 나라 근로시간은 대통령이 유연화하고자 하면 고무줄이 되고, 야당과 노동계가 줄이려고 하면 줄어드는가. 한때 세계 최장이라 자랑했던 이 나라 근로시간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만 해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018년 39.4시간에서 지난해 38시간으로 줄었다. 노동시간은 주는데 국민소득은 늘어 3만5000달러에 달한다. 이게 정치인들이 근로시간 줄이라는 법 만든 덕분인가.

우리나라 노동 관계법은 1953년 제

정됐다.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이 그때 처음 정해졌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면당했다. 지키지 않으려 했다기보다 지키기 형편이 못 됐다. 기술 없고 생산성 낮은 나라 국민은 몸으로 벌여 먹는 수밖에 없다. 반세기 전,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1950~60년대 버스 승차차 보조원(안내양)의 평균 근로시간은 18시간이었다. 하루 네 시간 자고 종일 흔들리는 버스에 서서 일하는 가혹한 근무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걸 고치고 싶어 했다. 1970년대 어느 회견장에서 "내 집, 내 딸, 내 동생"이란 표현까지

하루 18시간 노동 버스 안내양 서비스업 확산하며 사라져 대통령, 노동시간 고민보다 '좋은 일자리' 토대 마련 힘써야

써가며 안내양 처우 개선을 지시했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자며 격일제 도입도 추진했다. 하지만 모두 무산됐다. 수혜 대상인 안내양들까지 "근로시간 줄이면 월급도 준다"며 반대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결국 겨울철 버스 틈새로 들어오는 칼바람이라도 피하라며 방한복 1만 벌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버스 안내양을 장시간 노동에서 구한 것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었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며 버스의 운송 부담에 숨통이 트였다. 국민 주머

니에 여윌돈이 생기며 커진 서비스업 분야 새 일자리를 제공했다. 마침내 1989년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안내원 승무 조항이 삭제되며 후진국형 일자리인 안내양은 이 땅에서 사라졌다. 대신, 일은 덜 고되고 보수는 더 두둑한 일자리가 등장했다. 이 나라 근무시간 감축은 각 분야에서 이런 과정을 거친 결과다.

대통령은 이런 좋은 변화가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나게 하는 걸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은 개별 사업장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대통령은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당 근무 상한은 69시간이 아니라 60시간"이라고 해보아야 풍자 개그 소재밖에 안 된다.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실패했다. 잘사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며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하게 독려했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추락했고 나라는 가난해졌다. 김일성이 모든 분야에서 만기친람하며 지시하고 확인한 데 따른 부작용이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슐페터는 부(富)가 혁신을 통해 창출되지만 그 혁신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거나 더 열심히 오래 일하는 것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나라를 업그레이드하는 혁신은 노동량과 노동시간 투입이 아니라, 신기술·신제품·새로운 조직을 통해 이를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그 혁신의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다. 노동시간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김준의 맛과 섬 [133]

영광 송이도 대맛조개

추울 때가 비싸고, 비싸야 맛있다. 대맛조개를 채취하는 송이도 주민들의 말이다. 맛조개 중에 대나무처럼 굵다는 의미지만 맛도 '대맛'이다. 모래갯벌에서 서식하지만 동해 모래갯벌에서는 찾을 수 없고,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한다. 겨울부터 초봄까지 채취한다. 모래밭 30센티미터 내외의 깊은 곳에 서식하며 수관을 길게 내밀어 바닷물 속의 먹이를 걸러 먹는다. 따라서 주민들은 끝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린 50센티미터 이상의 꼬챙이 '씨개'를 구멍에 넣어 빼낸다. 대부분 조개들은 이렇게 생존과 죽음이 구멍에서 결정된다. 주민들은 단단한 모래갯벌을 발로 툭툭 밟아 물을 내뿜으며 수관을 움츠리는 사이에 구멍을 찾는다. 송이도에서 채취한 대맛조개는 영광

군 염산면 설도항에서 구할 수 있다. 겨울부터 벚꽃이 필 때까지 어시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뿐만 아니라 인천의 소래포구도 한강 하구 풀들이나 섬 주변의 모래갯벌에서 채취한 대맛조개를 판매했다. 송이도에는 대맛이 많이 서식하는 곳을 '맛등'이라 부른다. 송이도에서 각이도까지 약 3킬로미터에 이르는 모래갯벌이 두어 시간 만에 열리는 대맛조개와 백합을 채취한다.

철산 바다의 중심에 있는 송이도는 한때 조개 파시가 형성되기도 했고, 젓새우잡이의 중심이기도 했다. 허니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도 주민들은 완전자랑을 하고 대맛조개 채취에 나선다. 겨울철에 이렇다 할 소득원이 없는 송이도 주민들에게 대맛조개는



효자 중의 효자이며, 겨울과 이른 봄 섬 방문을 책임지기도 했다.

대맛조개는 된장국을 끓이거나, 돼지고기와 함께 주물럭을 만들어도 잘 어울린다. 가장 단순하게 찜이나 회로 먹어도 좋다. 대맛조개의 수관에 남아 있는 약간의 펄을 제거한 후 그대로 찜면 된다. 양념장을 올려도 좋다. 회로 먹을 때는 조개비와 살을 분리하고 내장도 제거한 후 불기를 제거하고 참기름 소금이나 초장을 찍어 먹으면 좋다. 대맛조개 살의 달콤함은 겨울도 좋지만 봄까지 먹을 수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社 說

7년 만에 대통령이 저출산위 주제, 정부 무관심이 이 지경 만든 것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무료로 하고 난임 시술비를 부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또 신혼부부 주택 구입 특례대출 기준과 다자녀 공공 주택 공급 기준을 완화했다. 실질적인 내용이지만 세계 최악인 저출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다. 1991년만 해도 합계 출산율 1.71명, 한 해 출생아 수 71만명이었는데 한 세대 만에 출산율은 절반으로, 출생아 수는 3분의 1로 추락했다. 이대로 가면 나라와 사회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그런 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 것이 무려 7년 만이라고 한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이 회의를 정식 주재한 적은 한 번도 없고 2017년 말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에 한 차례 참석했을 뿐이다. 대통령이 무관심한데 어떤 공무원이 공직 생활을 겪고 문제 해결에 달려들겠나.

중대 외교 현안 앞두고 대통령실 비서관들 교체, 무슨 일인가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교체됐다. 대통령실은 격무에 따른 통상적 교체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주무 비서관이 바뀐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얼마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도 물러났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때도 대통령실은 "개인 신상 이유"라고만 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안팎에선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이 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측에서 윤 대통령 방미에 맞춰 합동 문화 행사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이것을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측 답답이 없어 행사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를 윤 대통령이 뒤늦게 받았다고 한다. 미 측이 제안했다는 행사는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와 미국 가수 레이디가가의 합동 공연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에선 양국 친교를 위한 이런 문화 행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출산율 하락과 출산 냉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출산율이 1.27명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지만 곧 출산 축하금을 50만엔(약 5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육아 수당을 월 6만엔으로 대폭 올리는 등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출산·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출산 축하금, 아동 수당을 2030세대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격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내년부터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0세아 월 100만원, 1세아 50만원을 주기로 했고 8세 미만까지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다른 나열식 저출산 대책이나 복지를 조정하고 그 재원으로 아동수당을 월 5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18세까지 주는 것도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18세까지 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면 성인이 될 때까지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매년 약 30조원의 예산이 들지만 출산율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보고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물러난 외교비서관은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 참모였다. 안보실은 최근 치른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4월 한미 정상회담, 5월 G7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 다시 그 뒤의 일본 총리 방한 등 연쇄 정상 외교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어야 정상이다. 날로 고조되는 북핵 위협,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극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 행사들이다. 안보실 전원이 혼연일체가 돼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핵심 비서관들이 연이어 물러난 데 이어 이제는 김성만 국가안보실장 교체설까지 돌고 있다.

최근 북한은 이틀에 한 번꼴로 각종 미사일을 쏘며 대남 공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방사는 쓰나미로 항구 전체를 초토화하는 핵 어뢰 개발 주장까지 한다. 북핵 위협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동맹과 우방 외교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안보 실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난맥상이 보인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동영상 시청

日 교과서 역사 왜곡, 일에 선부른 기대 말고 냉정한 국익 외교를

일본 문부과학성의 28일 교과서 검정(檢定) 결과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기된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된다. 기존의 '일본 영토'에서 강화된 것이다. 또 일부 교과서에는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된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조선인 징병(徵兵)은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서술했다. 간토(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한 교과서에 실려 있던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등의 헛소문이 유포돼 많은 조선인이 살해됐다"는 칼럼은 사라졌다.

이번 일본 교과서 개악은 2021년 지침에 따른 것이긴 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 정상화' 선언을 하고 일본을 찾아 정상회담을 한 이후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한국 국민의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 수 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죄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일본에선 4월과 7월쯤 역시 독도와 한일 관계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와 방위백서가 나온다.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이런 일본의 일정에 대한 사전 협

의가 전혀 없었는지 의문이다. 정상회담 이후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일본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 잇달아 나오고 '일본이 뒤통수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본이 윤 대통령의 통 큰 양보에 감동해서 역사 문제에서 사죄하고,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다. 특히 일본은 그렇지 않다. 냉정하게 자신들이 취할 이익을 계산하며 극히 조금씩 움직일 뿐이다. 일본 신문의 27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이 잘됐다고 평가하는 일본인은 63%였지만 앞으로 한일 관계가 잘될 것이라고 보는 일본인은 35%에 불과했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비율이 56%로 훨씬 더 많은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한국의 국력이 커진 이후 일본에선 과거식의 관용이 사라졌다. 일본은 앞으로도 역사 왜곡 교과서를 내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전제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면서 냉정하게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해야 한다.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세대, 이승만에 경의를 표하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건국정신·4.19 정신 일치... 자유민주공화국 파괴세력 방어한다 4.19 추축들, 63년만에 우남에게 경의를 표했다 *4.19는 대한민국 헌법정신 되살린 친 대한민국 운동* 3월 26일의 명암... 우남 탄신 148주년, 천안함 피격 침몰 13주기

1948년 건국의 의미 ◆ 한반도 최초의 자유·민주·공화국 탄생 ◆ 한반도 최초의 자유·민주·공화주의 혁명

대한민국 수호에 4.19 중추세력 동참

이 절망적인 사태를 막으려면, 자유 국민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할 바를 해야 한다. 4.19 전후 세대들도 그 책무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바는 분명하다.

- ▲ 민주화 운동의 뿌리는 극좌 운동권이 해온 '1948년의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
- ▲ 본연의 민주화 운동은 예컨대 '이기봉 부통령' 만들려던 부정선거로 훼손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되살리려던 것
- ▲ 즉 '친(親) 대한민국' 운동이라는 것을 널리 주지시키고 증언하는 일이다.

서울 미문화원을 접거했던 1980년대 주동자도 최근 여러 인터뷰에서 "586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파산했다"라고 했다. 그들에 의해 왜곡된 현대사도 바로잡혀야 한다.

이 작업의 가장 원초적이고 상징적인 항목이 바로,

- ▲ 이승만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 ▲ 그분의 대한민국 건국을 기리는 일일 것이다.

이제 그날 현충원에 모인 모두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른 무언의 이심전심 아니었을까?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탄신 148주년 기념행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탄신 148주년을 맞아 백범집 이영일·한희갑·현승일 전 국회의원과 4.19를 이끈 주역들과 각계 현로들이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3월 26일 게재 되었습니다.



뉴데일리 '광고형 기사'를 지원해주세요

20번째입니다.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